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

文, 김연철 사의 수용 외교·안보 재편하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남북·대미관계 고려 전원교체를”
민주당, 정책점검 필요 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수장 교체가 없는 점도 외교·안보 라인 재편 가능성의 이유로 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 40분 김 장관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 어제 (18일) 김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7일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은 김 전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퇴한 데 대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를 정부에 요구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한 만큼 현재 외교·안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 인물 영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

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끌어간 안보팀이나 그에 관련된 통일부, 외교부 등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새로운 남북관계, 대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외교·안보를 해온 사람들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을 질책하는 한편, 현재 외교·안보 정책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교체를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 청와대 인사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말씀하신 점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8일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인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해수부,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오늘부터 일주일간 ‘정화주간’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7~8월은 장마철, 태풍 발생 등으로 인해 육상에서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6월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해양쓰레기 발생 요인을 줄이고, 7~8월에도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진행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함에 따라 양 부처 소속기관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해양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국 주요 연안과 하천주변 일대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전국 항만 물동량 1.9억톤... 12%p 감소

해수부, 5월 무역항 물동량

지난 1월부터 감소폭 점차 늘어나
수출입물동량 전년비 14%p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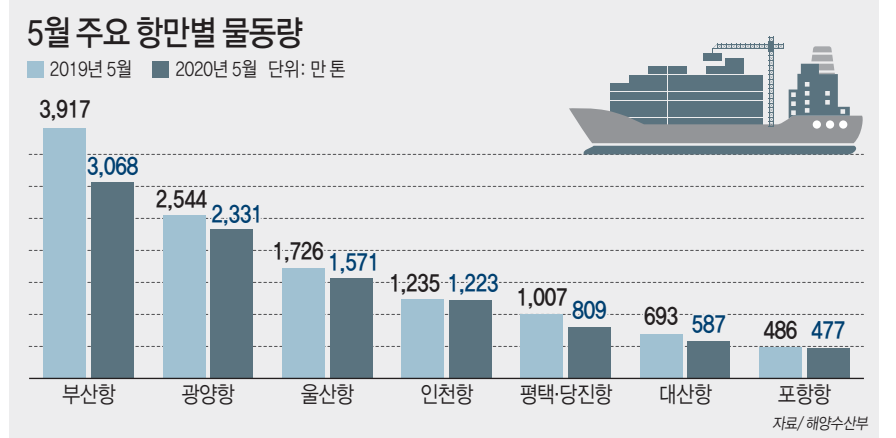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폭은 올해 1월부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5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 1874만 톤으로 1억 3498만 톤이던 전년 동월 대비 12%p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계속되면서 전년 동월 1억 1666만 톤 대비 14%p 감소한 총 1억 32만 톤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은 3월(4.8% ↓)과 4월(11.6% ↓)에 비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커지면서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안 물동량은 총 1842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증가했다. 지난 10월 인천 지역 모래 채취허가 재가에 따라 모래 물동량이 176만 톤으로 전년 동월 32만 톤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1.7%p, 8.4%p,



9.0%p, 1.0%p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광석, 유연탄, 철재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3%p, 8.0%p, 23.2%p 감소한 반면, 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2.3%p 증가했다.

전국항만의 5월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255만 TEU) 대비 9.1%p 감소한 232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화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p 감소한 130만 TEU를 기록했다. 중국의 항만운영 정상화에 따른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교역량 감소로 130만 TEU(11.0% ↓) 처리에 그쳤다.

환적화물은 인천항 글로벌 선사 신규항로 개설 등에 따른 물동량이 70%p 증가한 요인이 있었으나, 열라이언

스 재편으로 광양항 물동량이 46.5%p 감소하고 부산항도 4.7%p 감소해 전체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6.5%p 감소한 100만 TEU를 기록했다.

한편, 전년 동기 대비 적(積)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11.3%p 감소하고, 공(空) 컨테이너 처리 실적도 0.3% 소폭 감소함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중량(내품) 기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처리량은 2만 414만 톤(11.4% ↓)으로 집계됐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현재 시황 중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경영자금 지원 등 항만하역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물류환경에 대비해 하역요금신고(인가제)와 항만 시설 전용사용료 체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nj@

생활방역 지침 준수 ‘안심식당’ 전국 확대시행

농식품부, 덜어먹기 도구 비치 등 3대과제 필수... 지자체 자율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식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문화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식당이란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손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남,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한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의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공무원·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농진청, 태풍 대비 비닐하우스 관리 주의

농촌진흥청은 태풍과 폭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21일 태풍 대비 비닐하우스 관리요령을 발표하고, 태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시기에는 비닐하우스 걸 비닐이 찢어지거나 벗겨져 날아가는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반이 연약한 논이나 골바람, 돌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바람에 의해 비닐하우스가 통째로 뽑혀 날아가거나 옆으로 밀려 쓰러지기도 한다.

농업시설물 피해를 줄이려면 시설주위에서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우는 등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농진청은 조언했다.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갑작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선 연결 부위를 점검하고 낡은 전선은 교체한다.

신승업 재해예방공학과 과장은 “걸 비닐은 밴드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면서 “배기 팬을 작동시켜 내부 공기를 빼내 주면 내부압력이 줄어들어 부압으로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작물이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찬·축창, 출입문을 개방해 환기한다.

/이현진 기자

농촌 활성화 위해 ‘클린 사업장’ 선정

농촌진흥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안전여행 지침’에 맞춰 여름 휴가철에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농촌관광 클린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국내 여행 및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은 ▲고객 간 교차 최소화 ▲소모임 체형 프로그램 운영 ▲응급처치교육 이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현진 기자